

<div data-bbox="204 356 566 445"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61 465 512 510" data-label="Text"> <p>2012. 4. 17.</p> </div>	<div data-bbox="643 248 764 3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27 248 1283 358" data-label="Text"> <p>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p> </div>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최형표 (☎3480-1940)
	공보관실 ☎ 3480-1451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관련 예규 개정

대법원은 2012. 4. 13.자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형사재판부의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 추진

Ⅰ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

○ 개정 내용

- 2012. 4. 13.자로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형사 전담재판부의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함

○ 예규 개정 배경

- 최근 부화중지란 대량 유통사건,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 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식품·보건범죄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급 법원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 마련

②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의 담당 사건 범위

- 식품범죄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 보건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③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

- 국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보건범죄를 특정 전담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다수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 양형인자의 발굴이 용이해지고, 양형심리도 충실해져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이 도출된 것으로 기대

④ 향후 추진 계획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이미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
-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특히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①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

1. 개정 내용

-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형사 부분 전담재판부의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함

※ 자세한 예규 개정 내용은 별첨

2. 개정 배경

- 최근까지 불량·유해 식품(특히 학교 급식, 어린이용 음식물, 김치 등 국민먹

거리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장 현실화된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누적되어 가다가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적절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해짐
- 식품·보건범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식품·보건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 7. 1.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설정·공개

②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담당 사건의 범위

- 식품범죄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 보건범죄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③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

-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심층적 이해 기대

- 국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보건 범죄를 특정 전담 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한 합리적 양형 도출 기대
 - 다수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 양형인자의 발굴이 용이해지고, 양형심리도 충실해져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이 도출된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각급 법원 설치 추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과 협의하여 기존의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를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
 -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특히 식품 가공 공장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주요 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별표 - 형사 부분]

전문재판부의 종류 및 담당 사건 유형

	전문재판부	담당 사건(예시)
형사	경 제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대외무역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u>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u> ,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증권거래법, <u>외국환거래법</u> 위반 등 재정·조세·경제관련 각종 특별법위반 사건(위 각 법률 관련 특별법위반 사건 포함)
	교 통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등 교통 관련 사건
	선 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
	소 년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u>가정법원 지원이 없는</u> 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함께 담당할 수 있음)
	신 청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하는 형사신청사건(체포·구속적부심, 제1회 공판기일전 보석 청구사건 등), 형사보상, 준항고, 공조사건 등 본안재판부가 담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각종 신청사건
	영 장	구속영장 청구사건(신청부에 소속 가능)
	환 경	환경(공해) 관련 사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외국인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건
	식품·보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식품·보건관련 각종 특별법위반 사건